

[ 종합·국제 ]

# 배심원제 2009년 도입

## ■ 사법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정신청 전면 확대=무엇보다 통제되지 않은 권력으로 비판받던 검찰의 불기소 처분 권한이 재정신청 전면 확대에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 사건 범위를 현행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 감금 및 체포, 독직 폭행 등 3개 범죄에서 고소 사건 전체로 확대하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절차를 간소화했다.

고소인은 항고가 가각되면 재항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법사위 소위에서는 재정신청이 가각됐을 때 항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지만, 전체회의에서는 재정신청 남발을 막고 피고소인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고등법원에서 단심제로 처리하도록 손질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각 고법에서 30일 이내 재정신청을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어서 피고소인의 법적 지위가 장기간 불안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는 또 신청인이 피고소인의 변호사 선임료를 포함한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재정신청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뒀다.

◇2009년 배심제 도입=국적이 형사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의 형사재

국회가 지난달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결함에 따라 형사 소송 절차에 큰 변화가 일게 됐다.

## 피고인 원하면 7~9명 배심원 참여 항고 기각시 곧바로 재정신청 가능 조건부 석방·영장항고제는 제외돼

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원안을 크게 손대지 않고 통과돼 이르면 2009년부터 배심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은 고의로 사물을 야기한 범죄, 부패범죄, 강도·강간 결합범죄 중 피고인이 희망하는 사건에 국한해 7~9명의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초기 시행 착오를 우려해 배심원 판결은 판사에게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만 갖도록 하는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폭이 연루된 범죄나 성폭력 사건처럼 피해자가 반대하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패키지로 부결된 조건부석방·영장항고제=검찰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한 조건부 석방제도는 법원이 반대하는 영장항고제와 함께 개정 법률에서 제외됐다.

조건부 석방제는 공판, 보증금을 내거나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받아들이면 구속영장 발부 후 석방해주는 제도인데 검찰은 수사를 위한 구속영장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반대했다.

영장항고제는 검찰이나 피의자가 영장 발부·기각 때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검찰은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영장 항고제에 공을 들이지던 조건부 석방제와 함께 패키지로 부결됐다.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인정 요건 완화=법사위 소위에서는 영상녹화물의 경우 '모든 전 과정'을 녹음, 녹화했을 때만 증거 능력을 인정하도록 했는데 전체회의에서는 수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모든'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예를 들어 피의자를 3번 소환 조사했을 때 첫 번째는 녹음, 녹화를 하지 않고 2, 3번째만 녹음, 녹화를 했다더라도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영상녹화물은 본증거로는 제출할 수 없고 탄핵 증거나 조서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증거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이 그대로 유지됐다.



## 갈라파고스 관광객 급증 생태계 보호 시급

영국 박물학자 찰스 다윈이 진화론이론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준 갈라파고스 제도가 관광객의 증대로 망가지고 있어 생태보존론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달 29일 갈라파고스 제도의 자이언트 거북. /로이터=연합뉴스

## 美 테러보고서 '北 테러 지원국' 잔류

### 납북자 문제 언급은 축소

미 국무부는 연례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예년과 같이 '테러지원국'으로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이 테러지원국임을 설명하는 내용 중 납북자 문제 언급이 축약되는 등 부분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의 정통한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올해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때 '한국 전쟁 이래 납치 또는 억류된 사람이 약 485명에 달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는 추산한다' 등의 내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일본인 납북자 관련 언급도 전체적인 길이를 줄이되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1970년 항공기 납치행위와 관련된 적군과 요원들이 북한에 머물고 있다는 언급은 그대로 남는다.

한편 테러보고서는 전 세계 테러 공격이 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내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 증가로 인해 지난해 29% 증가했다고 밝힐 것으로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 이라크 미군 월 사망자 100명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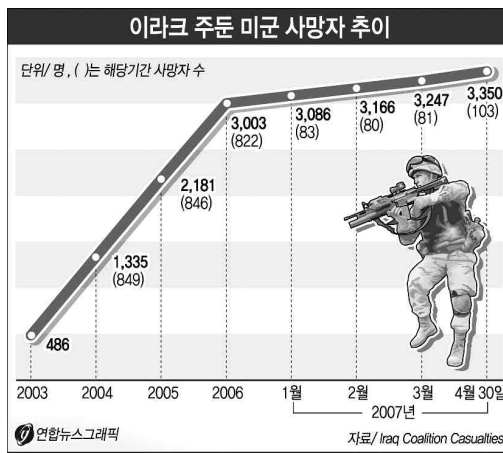
이라크 주둔 미군 월 사망자 수가 올해들어 처음으로 100명을 넘었다.

미군은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작전중 미군이 도로매설폭탄 공격과 소형 화기 공격으로 4명이 숨졌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미군의 발표로 4월 마지막날인 30일 현재 미군 월 사망자는 103명(AP와 이라크내 연합군 사망자 집계 사이트 통계)으로 집계됐다.

미군 월 사망자가 100명을 넘는 것은 올해들어 처음이며 지난해 12월(112명)에 이어 6달 만이다. 미군의 월 사망자가 100명이 넘는 달은 이라크전 개전 뒤 49개월 가운데 이번달을 포함, 6번째이다.

올해 들어 미군 월 사망자는 80여명 수준이었으나 2



월 14일부터 시작한 대대적인 이라크 안정화 작전과 이에 따른 미군 증파 및 이라크내 작전 증가로 저항세력이 노출이 빈번해지면서 사망자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두바이=연합뉴스

## 한·일 5년만의 '동해' 외교전쟁

### 7일 국제수로기구 총회... '해양과 바다의 경계' 논의

### 2002년 총회 때 日 방해로 '일본해' 삭제 투표 못해

한·일 양국의 자존심을 짊어지고 대리전을 펼치는 '동해'와 '일본해'가 5년 만에 전면전을 펼친다. 무대는 오는 7~11일 모나코에서 개최되는 제 17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다.

IHO는 회원국의 수로기관 간 협조와 수로측량 실시, 수로업무에 관한 기술개발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국제기구로 세계 각 바다 명칭을 결정하는 준거로 사용되는 해도(海圖)집인 '동해 표기'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 분쟁의 직접 발단인 된 뿌리가 바로 '해양과 바다의 경계'다.

1929년 발행된 '해양과 바다의 경계' 초판은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해역을 '일본해(Japan Sea)'로 표기했다. 식민지 상태인 한국이 IHO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못해 빛이 내지 않았다.

2002년 4월 모나코에서 열린 IHO 총회에서 1953년 3차 개정안이 나온 이후 50년 가까이 '일본해' 표기를 유

지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의 개정이 논의됐다.

당시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전은 실제 전쟁을 방불할 정도로 치열했다.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바다를 일본이란 특정 국가명으로 지칭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IHO 회원국 대표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IHO는 2002년 8월 동해가 한·일간 표기분쟁 지역임을 인정하고 양국이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 동해지역 해도를 이에 삭제한 채 '해양과 바다의 경계' 4차 개정안을 발간기로 방침을 정한 뒤 회원국 투표에 부쳤다.

'동해'를 실지는 못했지만 '일본해'를 빼냈다는 점에서 한국으로서는 일단 만족스런 결과였다.

그러나 한국의 적극적인 공세에 밀린 일본이 막판 반전을 이끌어냈다. 9월 신임 이사장 교체 후 IHO 사무국은 진행 중이던 투표 자체를 취

소했다.

한국 국회가 동해표기 결의안을 채택하고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동해연구소 관계자들로 구성된 민관합동합의단이 IHO를 방문해 '해양과 바다의 경계' 개정안 발간을 촉구했지만 IHO는 지금까지 4차 개정안을 발간하지 않고 있다.

IHO 사무국이 회원국에 보낸 회람에 따르면 이번 주말에 열릴 제17차 IHO 총회의 안건으로 '해양과 바다의 경계' 개정안 발간이 올라있는 것이 확인됐다. 2002년 외교전쟁의 속편이 예고된 것이다.

한국은 IHO 회원기구인 국립해양조사원과 외교부, 동북아시아재단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10여 명의 대표단을 IHO에 파견할 예정이다.

제17차 총회에서 일본은 겉으로는 논의 자체를 무시하는 동시에 뒤로는 막강한 외교력을 동원해 로비를 벌이는 전략을 쓸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일본해가 단독표기된 채 '해양과 바다의 경계' 개정안이 발간되는 일만은 반드시 저지한다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희소식 수강료 한빛고시**

기성주부 실업자 자영업자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수강료 환급**  
출석률 80%이상 시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무관※

**전국 최강의 강사진**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유명 출판사 저자 직강※

**탁월한 합격 시스템**

- 출결관리
- 학습 성취도에 따른 개별 분석지도
- 지습실, 시물람 무료 사용

합격률 1위 **A+ 현대고시학원** 236-2467~8 (동부경찰서 앞)

=행자부는 2011년까지 공무원 51,223명을 증원 할 계획이다=

**7.9 월 공무원 완전 대비**

기술직렬 ... 행정직렬 ... 공안직렬

**시험 안내** 서울 지방직 : 7월 8일 시행 1723명 전남 : 6월 23일 161명  
전북 지방직 : 제2회 9급 행정, 사회복지·사서 : 9월 8일 131명 공채  
※전남지방 7·9급 행정직 후보기 시험 시행 예정

※후반기 각 사·도별 9급 교육행정직 9월~11월 시행, 합격율이※

**개강: 5월 1일 주·야(총합)반 모집** \*장기이론반:주간 2개월 야간 3개월 완성  
\*핵심이론+문제풀이반 4주완성진행

고시명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중앙초고 후문앞) ☎ 222-4560

2007년 국가직, 지방직 시험합격= 한빛에있다! www.hanbitgosi.co.kr

**7.9 월 공무원 올해부터 5년간 5만명증원**

개설직종 행정직, 교육행정직, 사무직, 법안직, 경찰직, 사회복지, 군무원, 교정직, 농업직, 전산직, 보건직, 출입관리직, 기술직

**이론반 (2개월완성)** 암송용 교수법 - 절대합격반  
\*이론반 4.8~5.20(2개월 완성)  
\*시험대비 5.24~6.20(2개월 완성)

**서울시 맞춤형 문제풀이 (1개월완성)**  
\*모의고사식 문제풀이(6월 6일 - 7월 17일 완성)  
\*서울고시(9월 20일), 서울(12월 8일)  
시험장처럼 운영 생생한 실수(합격) : 4월 25일 - 시험전일까지

**한빛공무원학원 개강 5월 1일**  
전남대 후문 북구청 건너편 ☎ 234-0234 (홀/찍수만 매일 첫진도 개강)

**덤프트럭용 자동덤펀개**

**대리점 모집 안내**

당사는 덤프트럭용 자동덤펀개 전문메이커로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수양이라는 브랜드로 널리 소비자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금번 다음 지역의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개설예정지역**

- 광주광역시 지역
- 전남 광양, 순천시 지역
- 제주도 지역

**자격요건**

- 덤프,특장차 정비 유관업종을 영위하시는 분
- 용접설비가 갖추어진 공장을 경영하시는 분
- 덤프 자동덤펀개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분
- 부동산 담보 설정이 가능한 분

**특 전**

- 지역내에서의 독점적 영업권 보장
- 주요 직거래처 출고차 덤펀개 장차대형 보장 스카니아코리아, 볼보트럭, 티타대우상용차

**[주]SY테크(수양)** 문의: (055)385-2364/011-879-1472 Fax.(055)386-8517  
경남 양산시 웅상읍 주남리 499-4 http://21sooyang.com